2024
VOL.03

지식공유 브리프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KSP 포커스

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CID 연구포커스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소식

YKSP 출장 소회 서면 인터뷰(몽골/보스니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최희주
hjchoi@yulchon.com

인류의 발전과 헬스케어의 변화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 분투해 왔다.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해 땀을 흘렸고 안전을 확보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꿈이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류의 꿈은 쉽게 달성되지 않았다. 근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질병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은 무서운 존재였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힘(질병, 가뭄, 홍수, 지진, 화재)의 무력한 희생자일 뿐이었다.

콜레라, 황열,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역병)이 몰아치면 인류는 속수무책이었다. 기원전 430년 당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전염병(장티푸스로 추정)이 그리스에 상륙하자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죽었다. 여기에는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중세의 페스트는 1340년대에 발생했는데 약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죽음을 맞았다.[1)] 당시 페스트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중세 유럽 정치와 경제의 근간이었던 장원 제도와 봉건제가 몰락했고 이는 인류 역사가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로 작용했다.

인류가 질병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과학적 합리주의'였다. 중세 페스트의 유행 당시에도 전염병은 '신의 분노 혹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여겨졌고,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가 과학적 합리주의, 즉 모든 현상은 수학적 도구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 텄다.

과학적 합리주의로 인류는 질병을 차근차근 극복해 왔다. 오랜 항해에 나선 뱃사람들을 괴롭히던 괴혈병은 감귤류 섭취로, 말라리아는 키나 나무에서 추출한 퀴닌(키니네)의 보급으로 예방했다.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종두법을 개발해 천연두를 이겨냈다. 1880~90년대에는 프랑스의 파스퇴르와 독일의 코흐 등이 콜레라균, 페스트균, 말라리아 원충 등 수많은 병원체를 발견함으로써 인류를 괴롭혀 온 질병을 치료하는 혁명을 가져왔다.

질병 극복을 위한 과학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여전히

1 중국에서는 1,300만 명, 중근동에서는 2,4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한다.

인류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9세기 이후 콜레라는 여러 차례 세계를 휩쓸었다. 인도 벵골 지방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는 1817년부터 6년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2차 유행 시기인 1832년 즈음에는 프랑스에서만 9만 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0세기에도 전염병은 여전히 무서운 존재였다. 1918년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창궐한 스페인 독감은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5,000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인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질병을 극복해 냈고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렇지만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모든 인식을 바꾸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국가들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각국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관계 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20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억 4,8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695만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2023년 8월 31일까지 총 3,4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만 5,600명이 사망했다. 2003년의 사스(전 세계 환자 8,098명, 사망자 774명), 2009년의 신종플루(전 세계 사망자 1만 8,500명), 2015년의 메르스(전 세계 환자 1,791명, 사망자 640명)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충격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패러다임)과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각국의 보건 정책과 보건 시스템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보건의료 대응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근대 이후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헬스케어 패러다임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의 '과학적 합리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한 18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크게 3단계로 발전했다.

헬스케어 1.0 공중보건 시대에는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방역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감염병 사망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기술의 기반은 '직관 의학(Intuitive Medicine)'이었고 국가가 공급자가 되며 시민이 수요자가 되는 시기였다. 19세기 말까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발견되고, 치료책과 대응 방안이 개발되었으나 여전히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큰 상황이었다.

20세기에는 보건의료 기술과 약품 등의 획기적 발전으로 헬스케어 2.0 시대가 열렸다. 이 시기에는 질환 치료가 주된 목적이 되었고 기대수명이나 중대 질환 사망률이 국가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근거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을 중심으로 병원과 제약·의료기기 회사들이 환자를 수요자로 삼아 급격히 성장하였다. 특히 각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헬스케어 3.0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질환을 사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건강 수명과 의료의 질, 의료비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이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 기존의 병원이나 제약사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환자는 물론이고 비(非)환자를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

2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24년 정부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 예산이 122조 원에 달해 가장 크며 전체 예산의 18.6%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에서도 건강을 위한 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고 각종 건강기능식품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2019년 말에 발생해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는 기존의 헬스케어 패러다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 헬스케어 4.0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보건의료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이므로 글로벌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의 중요성과 역할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을 더욱 실감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헬스케어 4.0 시대

헬스케어 4.0 시대는 '건강 평화'로 명명되는 시대로서 보편적 건강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건강 형평성·회복탄력성이 성과지표가 되었으며 보건안보와 전 세계적 차원의 인도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헬스케어 4.0 시대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커뮤니티 전체의 건강 결과를 지표로 하는 '가치 기반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도 공중보건에서 보건 안보로 변화하여 주요국들은 보건의료기술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자국의 보건 안보를 확보하는 열쇠로 인식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가 정치와 안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의 중점이 환자 관리에서 건강관리로 이동하였고,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의 관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정책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 장벽을 완화할 필요도 커졌다. 또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건강 모니터링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신뢰도 상승과 역할의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표 1〉 헬스케어 패러다임 시대 구분에 따른 주요 특징

구분	헬스케어 1.0 (공중보건 시대)	헬스케어 2.0 (질병치료 시대)	헬스케어 3.0 (건강수명시대)	헬스케어 4.0 (건강평화 시대)
시기	18-20세기 초	20세기	21세기	2020년대 이후(포스트 코로나)
목적	감염병 예방/방역	질환 치료	질환 예방관리	보편적 건강보장
성과 지표	감염병 사망률	기대수명, 중대질환 사망률	건강수명, 의료질, 의료비	의료시스템 공공성·지속가능성, 건강형평성, 회복탄력성, 보건안보, 인도주의
기술 기반	Intuitive medicine (직관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 (근거의학)	Precision medicine (정밀의학)	Connected Health & Care
공급자	국가	병원, 제약/의료기기 기업	병원, 제약/의료기기 기업 + 병원ICT 자동차/건설 기업 등	병원, 기업 지역사회 + 제3섹터
수요자	시민	환자	환자 + 정상인	전국민 + 세계인

자료: 제 3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사회적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의료 자원의 분배와 접근 역량의 양극화가 드러나게 되면서 건강 격차와 의료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건강 양극화 현상'은 정치적으로 핫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안정 차원에서 필수 의료의 확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대응, 의료 데이터 사용의 활성화, 스마트기기 대중화를 배경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비대면 진료, 스마트 병원,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학연 차원의 합동 연구개발 등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KSP

코로나19는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변화된 시각에 따라 보건의료 KSP도 적극적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중점을 두고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보건 안보 KSP: 수원국이 전염병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 기기를 확보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계획과 기술에 대한 정책 자문

② 보건의료가 미발달한 국가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필수 의료 정책을 토대로 한 자문

③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자문

④ 정부의 신뢰 확보 방안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 소통에 대한 자문

⑤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자문

보건의료 KSP와 관련해 특히 중시할 사안은 보건의료의 신뢰성 확보와 각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각국에서는 백신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활발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백신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다. 후진국에서는 가짜 백신 등의 유행으로 애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보여주듯 '보건의료 행위와 기술에 대한 믿음'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보건의료 KSP도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을 넘어 '수원국의 정책 당국과 수원국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 자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보건의료 수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 공급되어도 이를 보관할 냉장 시설과 전기 시설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개발도상국은 교통 인프라와 수송 수단이 부족하므로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차원의 보건의료 발달은 '과학적 합리주의'의 정착에서 비롯됐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정책이 수원국에 받아들여지려면 '보건의료는 과학이고 케이(K)-의료는 검증된 건강지킴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국내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크다.

개발협력
지식공유
이슈톡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1센터
오범택
betoh@kpc.or.kr

가치사슬에서 ESG 관리의 중요성 강화

원재료 채굴과 구매, 가공, 제조, 마케팅, 배송, 소비 과정, 즉 전체 가치사슬에 대한 경영활동을 포괄하는 기업은 제한적이며,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은 더 세분화되고 있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도 비슷한 기업일지라도 가치사슬 내 경영활동 범위에 따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관리 범위와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투자 기관, 지역 정부 등이 기업의 ESG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ESG 관리 범위의 완전성과 관리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2024년 4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승인은 기업의 ESG 관리 범위를 법적 범위(legal entity)에서 영향 범위로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으로 하여금 가치사슬 전반의 정보를 ESG 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완전성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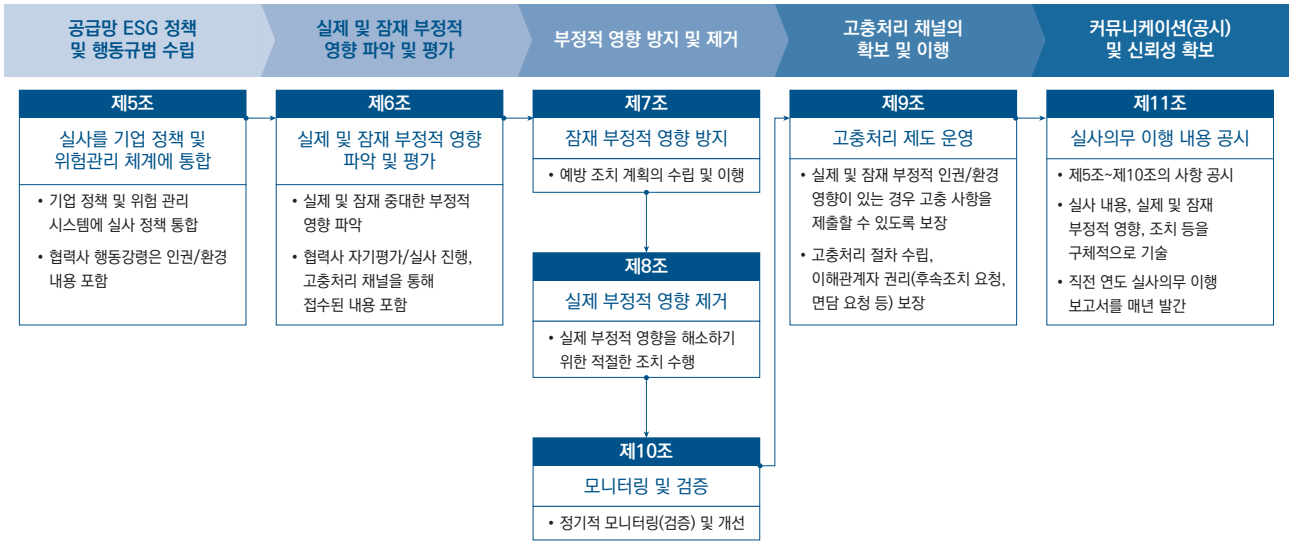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은 몇 가지 중요한 ESG 룰을 만들어 냈다. 우선 기존의 ESG 관리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침 승인 이후에 ESG의 이행 주체는 중소기업 등 대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심지어 1차 협력사 외에 2차 협력사와 원재료 구매처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됨으로 기존의 그 어떤 ESG 규제보다 영향력이 크며 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실사 지침에 '거래 관계자의 종료 항목'을 비롯해 리스크 저감을 목적으로 한 거래 규정을 포함한 것은 필연적이다. 마지막으로, EU 실사 지침은 단지 유럽 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실사 지침 내의 '역외 기업 규정'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 낸 제품과 서비스로 EU 지역 내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상관없이 지침에 적용받는다.

이에 우리 기업이 전략적으로 공급망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매과정에 ESG 원칙과 기준 반영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가 실현되는 공간은 단연 구매 과정이다. 기업은 구매과정에 공급망 ESG의 원칙과 기준을

[그림 1] 공급망 ESG 관리 절차와 EU 공급망 실사 지침 요구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1센터,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 발표 자료, 2024년 5월 9일,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기반으로 재구성

반영하며, 협력사 행동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이나 지속가능한 구매 정책(Sustainable Purchasing Policy)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는 다양한 ESG 관련 원칙과 전략이 반영되는데 '아동·강제 노동, 인도적 대우,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과 같은 인권 항목'과 '기후변화와 안전한 물질 관리 등의 환경 요소'는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구매 기준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해 원청 기업의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상업 관계의 종료를 검토하는 것도 실사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거래 관계 종료 조항은 잠재적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상생을 추구해 온 국내 대기업에서는 선뜻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조항이다.

또한 많은 국내 기업이 공급망 ESG를 전개함에 있어 많은 지표를 차용한다. 노동·인권을 비롯해 환경, 안전, 윤리, 경영 일반 등 많게는 60개 이상의 자체 지표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많은 지표를 조사하는 만큼 다방면의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급망 ESG 실사 비용을 원청이 부담하는 국내 기업의 현실과 협력사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실사법 대응 중심의 노동·인권, 기후변화, 유해물질 중심의 전략적 접근과 간소하게 구성된 점검 지표가 필요하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망 ESG 접근이 필수적

공급망 ESG를 관리함에 있어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핵심 리스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분쟁·책임 광물 등 원재료 이슈가 핵심이지만 의류 및 화장품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가 주요 쟁점일 수 있다. 건설 산업은 사업장 외부보다 사업장 내의 2차, 3차 협력회사의 리스크가 핵심이다. 따라서 산업별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적 접근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재료에 대한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도체, 전기·전자 등의 산업에 필요한 분쟁 · 책임 광물 관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원재료에 대한 이슈는 화장품, 식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로의 진화에 따라 전기 · 전자 산업 ESG 리스크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고무, 가죽 등 다양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 경우에는 팜유, 새우 등 원재료 취급 과정에서 아동 · 강제노동 이슈 등이 심심치 않게 보고된다. 결국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정의하는 공급망의 범위 중 간접(indirect) 영역 중 가장 높은 리스크는 원재료 취급 과정에 있다.

다양한 내외부 네트워크의 활용과 효과적 공급망 ESG 추진

기업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의 대기업은 많게는 협력회사 몇 천 개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많은 협력 회사의 ESG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협력회사를 중요도와 잠재 리스크에 따라 구분하고, 관리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매 금액과 잠재 위험이 큰 협력회사는 우선 관리되어야 하며, 그 외의 협력회사는 규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관리 시기가 정해졌다면 기업이 직접 몇 천 개나 되는 협력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다양한 외부 툴을 활용하길 권고한다. 이는 효과성은 물론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향후 공급망 ESG 결과를 구매과정에 포함한다면, 구매 부서와 협력회사의 이해 상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외부 툴 기반의 ESG 평가가 더 투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Certification'과 'Audit'이다. SA8000(Social Accountability Management)과 같은 'Certification'은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사업장의 실질적 ESG 리스크를 확인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반면 사업장의 온오프라인 실사를 원칙으로 하는 'Audit'은 실질적인 ESG 확인에 유용하며 많은 글로벌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EcoVadis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특히 EcoVadis는 적은 비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ESG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어서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계기로 기업이 관리해야 할 ESG의 범위는 영향 범위까지, 나아가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도 기업의 공급망 구조, 산업 특성 등을 기반으로 순차적 공급망 ESG 관리를 해야 한다. 이때 내부적인 실사보다는 외부 평가기관과 협업함으로써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권혁신**
heyoksin@gmail.com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선분양제도 채택

산업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곳에 인구가 몰리며 도시화가 진행된다. 그러면 모인 인구가 거주할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고 금융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 이럴 때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바로 주택 선분양제도이다.

주택 선분양제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준공 전에 수분양자[1]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의 일부를 미리 받아 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즉, 주택의 대량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제도권 금융의 건설 자금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요자의 자금을 주택 건설에 활용하고 주택 수요를 미리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수요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완성된 제품을 살펴보고 검토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지만 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선금을 주고서라도 미리 확보하려고 한다. 더욱이 주택처럼 필수재이면서도 수익성이 높다면 선금을 지불할 의사가 다분하다. 한국에서는 주택 선분양제도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주택 산업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또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홍콩 등의 많은 나라에서도 선분양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택 선분양제도의 특징

주택 선분양제도의 특징은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의 융통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으므로 비제도권 금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제도권 금융에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주택 선분양제도에는 몇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첫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주택이 준공되지 못하면 수분양자는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둘째, 건설업체의

1 주택 사업자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를 수분양자라고 부른다.

건설 지연으로 인해 입주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주택분양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확대

주택 선분양제는 주택공급의 확대에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공급자 중심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리스크가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업체가 부도가 나면 진행 중인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부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상당 부분을 수요자가 떠안게 된다. 따라서 주택 선분양제도에 많은 주택 수요자가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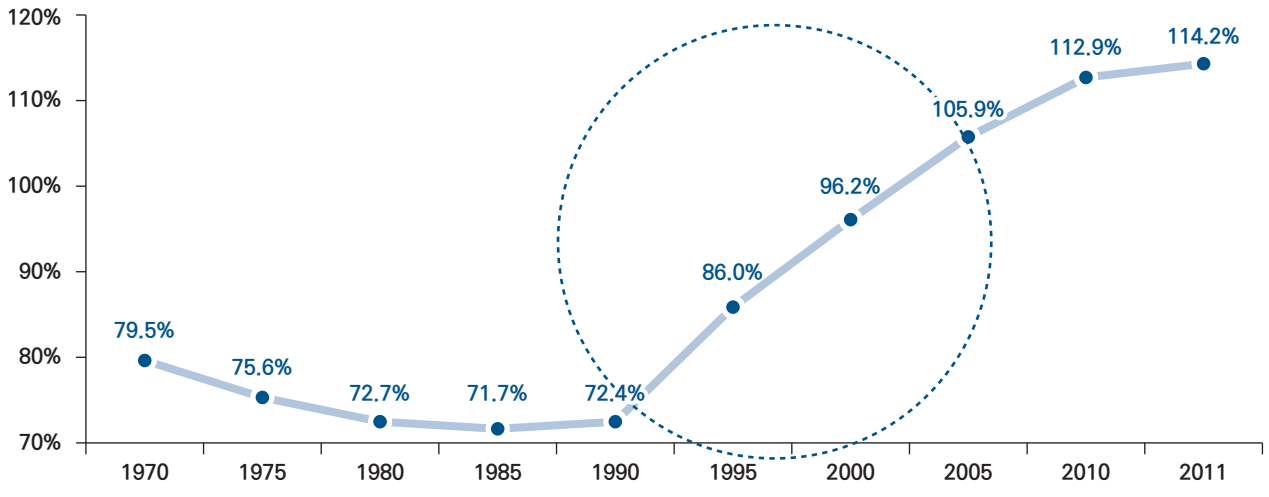
한국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주택분양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주택분양 보증은 사업 주체가 파산하거나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해당 사업장의 분양 이행(사용 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과 소유권 보전 등기를 포함) 또는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면, 주택분양보증제를 도입한 199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105.9%에 이르렀다. 주택분양보증제의 도입만으로 주택 보급률을 높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많이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식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KSP 과제 신청과 성과

한국은 30년 이상 주택 선분양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했고, 특히 선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주택분양보증제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성과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많은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끌었다.

그중 베트남은 KSP 과제를 통해 2014년 11월 「부동산 사업법」을 개정하고, 2015년 7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보증

[그림 1] 한국의 주택보급률 추이



자료: 통계청, (종전) 주택 보급률 기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카자흐스탄이다. 카자흐스탄은 2008년 금융위기로 건설사의 연쇄 부도를 경험한 뒤, 한국 분양보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였다. 2014년 HUG와 카자흐스탄의 국영기업 바이테렉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법령·제도를 따라 분양 보증 관련 법을 제정하였으며, HUG처럼 분양 보증을 책임지는 주택보증기금(HGF)을 설립했다.

그러나 기관 설립 이후, 사업장 관리, 리스크 관리, 보증 이행 방안 결정 등의 실제 제도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주택 분양 메커니즘 및 보증제도를 심화 연구하여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KDI에 KSP 과제를 신청하여 2019/20 KSP 과제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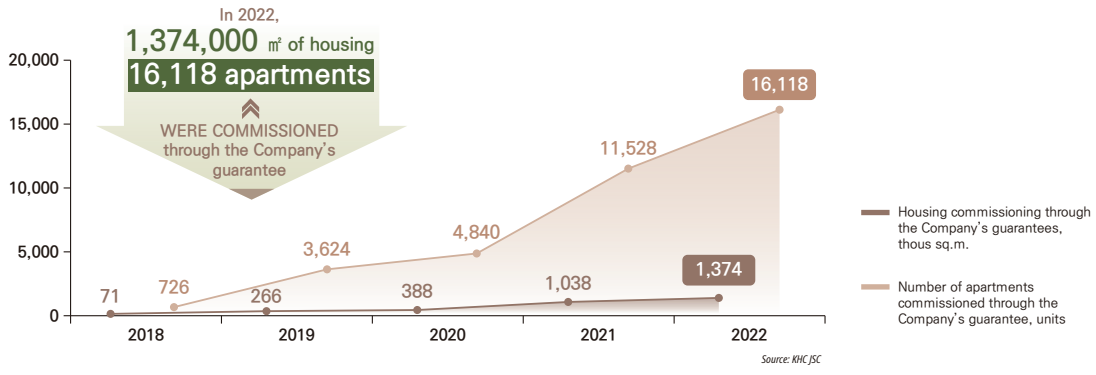
2019/20 KSP 과제를 통해 세 가지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첫째, 카자흐스탄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보증 발급 프로세스 개선, 사업장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신용평가와 리스크 평가를 위한 초기 모델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양 보증 사고 발생 시에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증 이행 절차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 제안은 모두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제도에 반영되었다.

그 후 바이테렉 산하의 주택 관련 자회사 3곳을 통합하여 2021년 1월 카자흐스탄주택공사(Kazakhstan Housing Company, KHC)로 출범했고, KHC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 하고 있다. 다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KHC의 분양 보증 세대수는 2022년 1만 6,118세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D 건설사는 주택분양 제도 도입을 통해 카자흐스탄 건설사업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D 건설사가 건설한 아파트는 카자흐스탄에서 최고급 아파트로 인정받으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KSP 과제를 통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지원

선분양과 주택분양보증제도를 통한 한국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개발도상국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공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KSP 과제를 통해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분양 보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식 주택금융제도를 수출한다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카자흐스탄의 주택분양보증 실적 추이



자료: Kazakhstan Housign Company, 2022 Annual Report, p. 33.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송지선
jsusong21@mofa.go.kr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한 지 약 14년이 지났다. 그간 한국은 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한국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분야로는 개발효과성 의제를 꼽을 수 있다.

초기 한국은 원조효과성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는 데 주력하였다. DAC는 2008년의 특별검토와 2012년의 동료검토에서 한국이 ▲비(非)DAC 회원국으로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 이행을 지지하고 ▲원조효과성 작업반의 핵심(leading)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4)을 개최하고 ▲부산선언의 협상 과정과 채택 후에도 비DAC 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HLF-4는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조효과성의 이행 사항을 평가·공유하며,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과를 유지·제고하기 위해 HLF-4 이후의 후속 조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이 출범하였다.

GPEDC는 개발효과성 원칙, 포용성, 이행 점검 등의 측면에서 부산선언과 연속성을 갖는다. 먼저, GPEDC는 주인의식, 성과 중심 개발,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이라는 4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공여국, 수원국, 시민사회, 의회, 국제기구,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GPEDC는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사회의 4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세부목표(5.c, 17.15, 17.16)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이러한 활동은 부산선언 이행의 책무성 확보, 개발효과성 의제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 유지, 지식과 사례 공유 등에도 기여한다.

한국은 ▲GPEDC 초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GPEDC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하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부산포럼)을 개최하고 ▲연수사업인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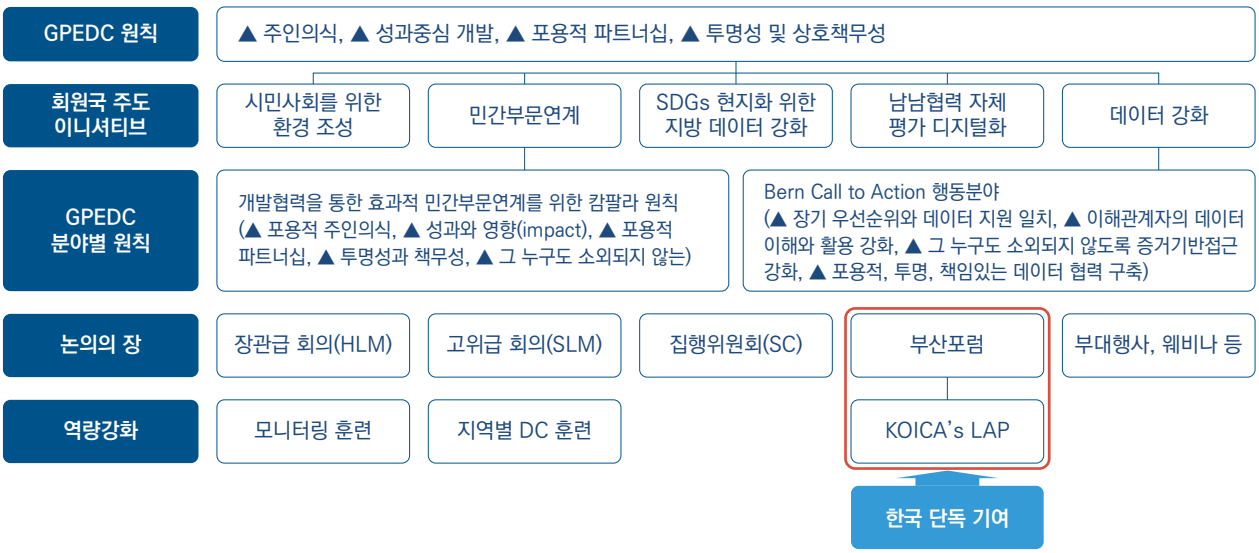
and Accelerating Program(LAP)'을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기여를 해왔다. 부산포럼은 부산선언 이행 점검의 활성화, GPEDC의 성과 제고, GPEDC 외연의 확대 등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LAP은 부산원칙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실무급 연수사업으로서 GPEDC 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이행 역량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4년 제1차 GPEDC 장관급 회의 결과문서는 한국의 연례 국제회의(부산포럼) 개최를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한 부산공약의 이행 점검, GPEDC의 성과 제고, GPEDC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최근 발간된 DAC 동료검토에서도 한국이 부산(HLF-4)의 유산(legacy)과 그간의 개발효과성 논의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이에 기반하여 공여국 조정 플랫폼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전략적 정책 대화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GPEDC 모니터링에서 협력국 및 공관 동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 GPEDC는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의 확대, 국익 부상, 개발효과성 원칙에 대한 정치적 동력 약화 등으로 인해 개발효과성 담론은 유용성(relevance)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주요 남남협력국인 중국, 인도 등은 GPEDC를 선진국 중심의 논의 기구로 이해하고 있어 글로벌 사우스로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발협력 행위자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관리·조정하는 기능이 제한적이며 ▲자발적 참여에 기반함에 따라 실질적 이행과 책무성 확보에는 한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GPEDC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심화와 공여국 정부의 제한적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확대로 인해 ODA의 수급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ODA의 효율적·효과적 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개발효과성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GPEDC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 공공과 민간,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용하는 포괄적인 개발협력 파트너십

[그림 1] GPEDC 구조와 한국의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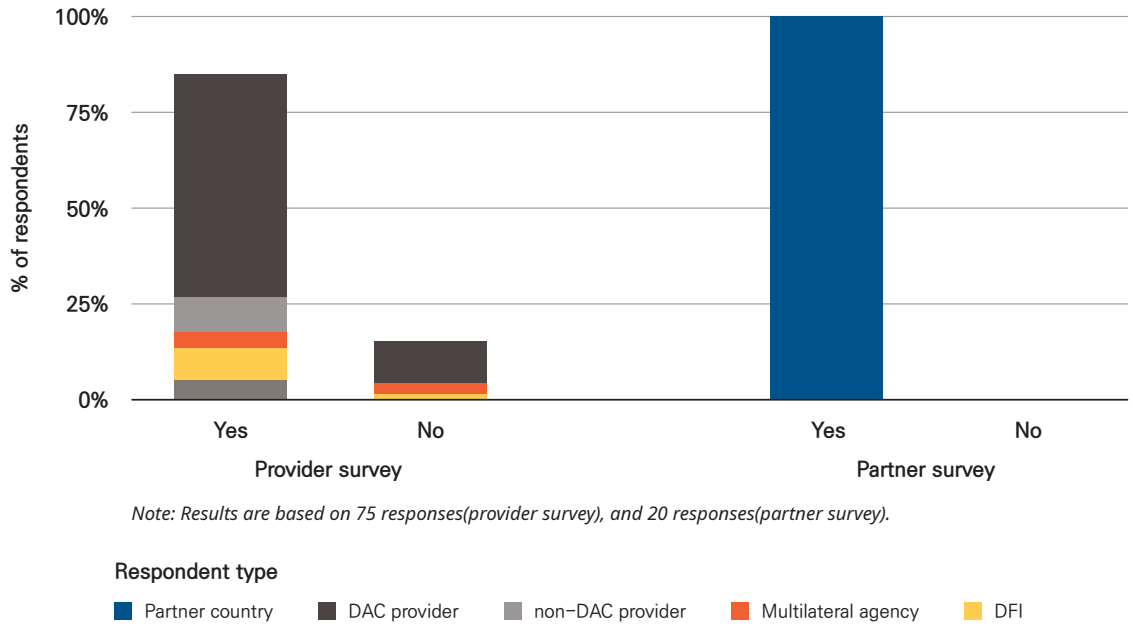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플랫폼이다. 셋째,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GPEDC의 4대 원칙을 토대로 하는 민간부문 연계 원칙, 데이터 강화 행동 분야 등을 제시함으로써 GPEDC 원칙이 다양한 의제와 이슈에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개발효과성 원칙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여전히 높다.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2022)[1]에 따르면, 다수의 공여국과 협력국은 GPEDC 4대 원칙을 변화하는 개발협력 지형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용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GPEDC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면 개발효과성 논의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다자 개발협력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Post-SDGs 시대 GPEDC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GPEDC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고위급 인사의 인식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 모니터링 등 한국 개발협력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부산포럼과 LAP의 목적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GPEDC 활동과의 상호보완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필요시 내용과 형태 등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넷째, 국내에서도 GPEDC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논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ㄱ

[그림 2] 행위자별 GPEDC 원칙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결과

Figure 11. Answers to "Are these principles still relevant for considering best practice on effectiveness?" by agency type



자료: Calleja and Cichocka (2022)

1 Calleja, Rachael and Beata Cichocka (2022).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the "New Normal": What Do the Changing Roles and Purposes of ODA Mean for the Effectiveness Agenda?.* CGD Policy Paper 255.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KSP
포커스

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전문연구원
최효정
hchoe@kdi.re.kr

연구원
안치영
chiyeong@kdi.re.kr

유럽연합(EU)의 그린 딜(Green Deal)과 한-EU 파트너십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 친환경 기술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 생물다양성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 감축」. 2019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과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선언했다.[1] 이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중심의 '그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주요 산업정책과 모빌리티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은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는 EU의 신성장 전략에 발맞춰 2023년 5월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한-EU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을 체결했다.[2]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헝가리

유럽 각 국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공유하는 동시에 유럽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헝가리는 그린 딜 정책 방향에 맞춘 신산업 전략(스마트 모빌리티, 배터리, 에너지 분야 등)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SDI, SK 온 등이 헝가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관련 부품·소재 기업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이 2019년, 2021년, 2022년에 헝가리에 최대 투자를 한 국가[3]였다는 점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헝가리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1 European Commission (2019e)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5. 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459

3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2024. 3. 21.)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4270&pNttSn=213364

헝가리 경제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

헝가리는 이모빌리티(E-Mobility) 이행 계획(Jedlik Anyos Terv, JAT)[4]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시장 확장을 위한 충전 인프라, 배터리, 인력 양성 등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① 전기차 · 배터리 산업 숙련 인력 양성, 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③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개발, ④ 상용차 탈탄소화, ⑤ 배터리 전주기 관리 등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된 헝가리 EIPP를 진행하고 있다.

EIPP, 다년도사업을 통한 한-헝 파트너십 강화와 효과성

EIPP는 양국 간 경제협력이 유망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주제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다년간 협력하는 종합개발 컨설팅 사업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각 사업별로 심화된 연구내용을 통해 사업의 초점을 정책기술 자문에서 자문 결과에 대한 이행 지원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처럼 EIPP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다년도의 심화 연구와 협력국과의 협의 과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3차 연도 협력을 앞둔 시점에서 헝가리 EIPP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EIPP 협력의 방향성과 기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헝가리 EIPP '상용차 탈탄소화' 사업은 헝가리 상용차[화물 트럭, 대중교통(버스)]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도시 물류 및 소도시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1차 연도 사업은 헝가리 정부의 기초 수요를 반영하여 친환경 라스트마일 배송[5] 체계 구축과 소도시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헝가리의 정책 현황과 우리나라의 정책·기술적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디젤 화물차에 대한 탄소 배출량 규제 개선, △로봇·드론·소형 친환경차 등의 활용 확대, △도심 내 물류센터(MFC) 구축을 제안하고, △수요응답형 전기버스(DR E-bus) 서비스와 같은 신기술 도입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 전반에서 현지의 다양한 협력 기관과 면담을 실시하며, 이는 헝가리 측의 실행 의지가 있는 제언에 집중하고 차년도 협력의 방향성을 함께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MFC 구축에 대한 헝가리 우정본부(MPL)의 수요와 DR E-bus 도입에 대한 교통과학원(KTI) 및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교(BME)의 헝가리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결과는 차년도 사업 기획에 적극 반영되어 2차 연도의 사업 주제는 △MFC 구축을 위한 최적 입지 분석 및 운영모델

4 헝가리 정부는 '이모빌리티 이행 계획(Jedlik Anyos Terv, JAT) 2.0'을 통해 2030년까지 45만대의 전기차 주행, 4만 5천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중교통의 탈탄소화 등 9개의 주요 목표 공표

5 유통업체의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뜻하는 용어로,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면서 생겨난 신조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개발, △DR E-bus 시범사업의 운영 계획 수립으로 구체화되었다. 한편, 협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향후 시범사업 등의 이행을 위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MFC와 관련해서는 헝가리 우정본부 및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 및 국내 스마트 물류기업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향후 헝가리에 실현 가능한 MFC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DR E-bus의 경우에는 차년도 시범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국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플랫폼(현대자동차 셔클)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 후보지 현장 답사, 지방자치단체(시장)의 사업 추진 의지 확인 및 협조 요청, 버스 운영사(Volánbusz)에 대한 현물(버스)과 인력(기사) 지원 요청 등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3차 연도 사업은 그간의 연구와 협의에 대한 이행의 관점에서 △MFC 구축·운영 계획 수립, △DR E-bus 시범사업 운영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2차 연도 사업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1개 도시)를 선정하고 DR E-bus 서비스를 실제 운영함으로써 제언의 이행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토와 기술 호환성 보완을 통해 헝가리의 다양한 도시에 우리나라 세종시의 셔클과 같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다년간의 EIPP 협력이 양국의 경제협력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후속 사업을 기획하고, EU 펀드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도 지속될 것이다.

한국-헝가리, 스마트그린 모빌리티를 통한 경제협력 파트너십

EIPP는 단년도 단위의 정책 분석과 자문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기술 협력, 역량 강화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과 협력국 간 잠재 협력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협력 계획과 재원 조달 전략까지 제안하는 종합 개발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협력국과 사전에 협의된 초기 기획을 기초로 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양국의 수요 충족 방향으로 탄력적인 기획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EIPP의 특성은 협력국 협조도의 제고, 실질적 성과 도출, 사업 효과성 증대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책 자문사업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헝가리 EIPP는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를 향한 양국의 연구·경제협력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큰 틀에서 헝가리의 모빌리티 분야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풍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CID
연구
포커스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전문연구원
남보라
bora221@kdi.re.kr

정책자문2팀장
김하아람
kharam@kdi.re.kr

불가리아의 연구개발 수준과 혁신 역량은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비해 아직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2022년에 발표된 'EC 혁신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혁신 지수는 EU 평균의 45.2% 수준으로 전체 27개 회원국 중 26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EC, 2022)[1]. 또한 불가리아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약 0.77%로 EU 평균인 약 2.26%에 미치지 못하며, 1인당 연구개발 지출도 약 2만 유로 수준으로 EU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EU, 2023)[2].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2017-2030 불가리아 과학·연구개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Development of Scientific Research 2017-30)', '국가 연구 인프라 로드맵 2020-2027(National Roadmap for Research and Infrastructure 2020-2027)'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설립된 소피아테크파크(Sofia Tech Park)는 불가리아의 첫 과학기술 테크노파크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촉진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인큐베이션 기능을 하며 네트워킹과 성과를 확산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현재 소피아테크파크는 국내외 주요 대학, 기업, 기관과 협약을 맺으며 혁신을 도모하며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는 자동차, 정보통신, 그린에너지,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약 42개가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소피아테크파크의 주요 활동으로는 창업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연구·실험 단지를 운영하며 각종 포럼 및 체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자문 서비스, 교육,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노베이션 스타터 박스(Innovation Starter Box), 네베크(Neveq), 테크 투어글로벌(Tech Tour Global), 불가리아 ICT, 자동차 클러스터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 유치 및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유럽기업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 EEN)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불가리아의 중소기업들이 EU와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클럽하우스, 공용 사무실 등의 시설을 통해 기업 간 협업과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피아테크파크에는 총

1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2.

2 European Union. (2023).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

11개의 연구·실험 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각 시설에 대한 정보나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기타 활동으로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테크노 매직랜드를 운영하며 유소년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과 지역 및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테크노파크 내에서 일어나는 대학, 산업, 정부 간 협력과 상호작용은 지식의 생산·전달·응용을 촉진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3]. 이에 소피아테크파크가 불가리아 내 산학연 연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산학연 주체별로 운영 현황을 진단하였다.

소피아테크파크 내 입주 기업 중 1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입주사는 산업과 대학 순으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었고, 정부와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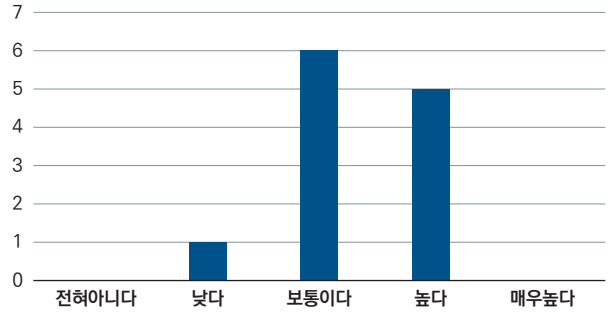
〈표 1〉 소피아테크파크 입주 기업과 기관 유형별 협력 종류

기관	연구·실험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세미나	투자 금융
대학	3	2	7	0	0
기업	3	7	2	1	6
정부	0	1	0	2	2
연구기관	3	2	0	1	0
유럽연합	0	0	0	2	7
국제기구	0	4	2	1	1
기타	0	0	0	0	0

자료: 입주사 설문값 항목별 통합.

또한 소피아테크파크의 서비스가 산학연 협력 생태계의 구축에 기여한 바에 대한 설문에서는 보통과 높음 수준의 인식도를 보였다(그림 1).

[그림 1] 소피아테크파크의 불가리아 산학연 환경 조성 기여도



마지막으로 주요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소피아테크파크가 산학연 주체별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 · 정리하였다(표 2).

〈표 2〉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주체별 활동 및 운영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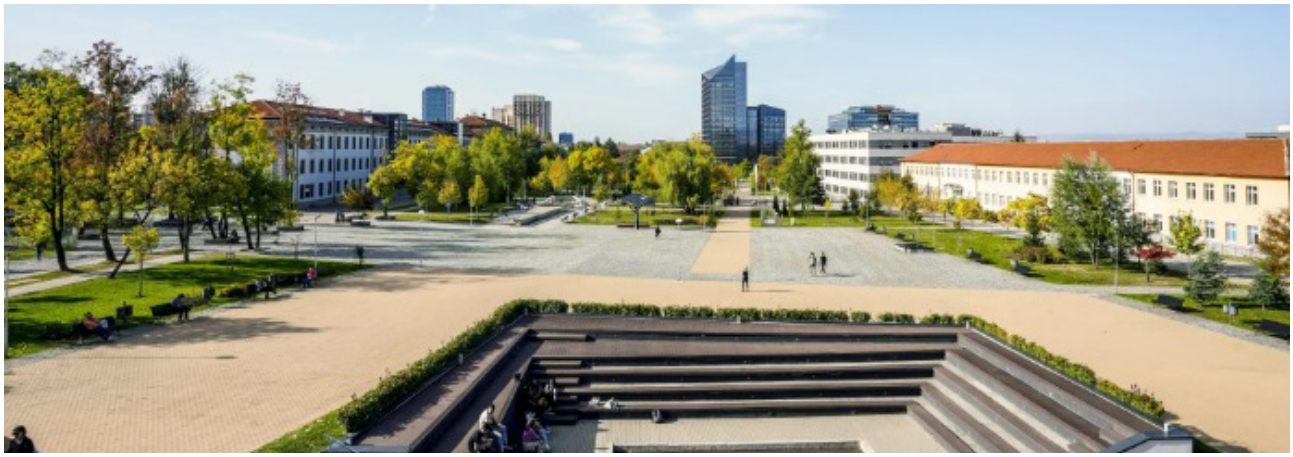
기능	주요 내용	운영 수준
1. 대학		
연구 개발	• 소피아대, 소피아기술대, 불가리아과학연구소 등 불가리아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양호) • 안정적인 연구동 운영과 연구개발을 위한 상근직 인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인력이 인근 대학 교수가 겸임하는 구조라 운영에 어려움 있음(미흡)	보통
인재 양성	• 테크노파크를 통해 산업계 인력을 교원으로 배치하여 학생들을 현장 경험에 노출시키고 산업 전문가로 키우는 데 기여	양호
지식 전달	• Club of Interest를 통해 대학에서 연구된 기술을 산업체에 소개하고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테크노파크의 규모에 비해서 작은 편	보통

3 Etzkowitz, H., & Leydesdorff, L. (1997).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n science policy dimensions of the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science and Public Policy, 24(1), 2-5

기능	주요 내용	운영 수준
2. 산업		
기술 수용 및 응용	• 산업체(기업)가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수용하고 이를 현업에서 응용하기보다는 기업에서 상용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해외대학과 협업 중	보통
자금 지원	•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의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혹은 벤처캐피털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아야 하는 기업이 다수	미흡
시장기회 발굴	• Barin Sports, Myx와 같은 선도적 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기회를 식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통
3. 정부		
정책 및 규제	• '2017-2030 과학 연구개발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간의 분절화 문제, 정책 조정 체계 미흡으로 유기적인 정책 구성이 어려움	미흡
자금 지원	•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자금 제공이 부족. STP 자체 임대 수익으로 운영되어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기에 부족	미흡
기술 정책	• '국가 인공지능 진흥계획(AI National Strategy)'과 같은 특정 기술 육성 정책이 존재하나 전반적인 규제는 미흡한 상태	미흡

자료: 저자 작성(설문 및 인터뷰 결과)

이처럼 불가리아 소피아테크파크는 국가 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기업들은 대학과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 산업 내에서도 기술 교류 및 투자 활동 등을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정부와는 부처 분절화로 인해 정책 조정 체계, 자금 지원 및 기술 정책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향후 소피아테크파크의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 기업의 통합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통한 교류 활성화와 자금 출연 기관의 다양화로 연구개발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책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YKSP 7기 출장 소회 서면 인터뷰 (몽골/보스니아)

23/24 몽골 YKSP
유소망
nathanyoo612@gmail.com

23/24 보스니아 YKSP
김은호
moseskim999@gmail.com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YKSP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유소망 | 저는 YKSP 7기에 지원하기 이전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한국사무소에서 여러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턴 일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YKSP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인도적 지원을 넘어 정책자문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은호 |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KSP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협력국에 공유하여 공익을 실현하고, 관련 분야를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23/24년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 기간 전후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나요?

유소망 | 출장 전후 저의 주된 역할은 행사들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매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사진 촬영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에 필요한 발표 자료집 및 배너 등을 배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김은호 | 23/2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KSP 최종보고회 및 고위 정책 대화 출장에 참여하여 회의 사전 준비, 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소감은 어땠나요?

유소망 | 이전에는 몽골에 대해 생각했을 때 칭기즈칸과 고비 사막 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YKSP 출장을 통해 몽골의 좀 더 입체적인 면을 알 수 있었고 몽골의 정책연구기관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해당 경험을 하게 해주신 KDI 측에 감사 드립니다.

김은호 | 이번 출장을 통해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한국의 정책 경험을 필요한 국가에 공유한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출장을 다녀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정책대화 및 면담 속 기억에 남았던 순간 등)은 무엇일까요?

유소망 | 저는 최종연구결과 발표 시간 때 임원혁 박사님이 하신 발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몽골 정책연구기관 NDI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네 가지 기관들을 분석해 NDI가 어떻게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면 좋을지 조언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 이었습니다.

김은호 | 최종보고회에서 협력부서인 간접세청 청장님이 우리의 정책 공유 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크게 이바지했음을 확인했고 매우 보람찼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 향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써의 성장을 위한 YKSP 활동에 있어서의 다짐 및 YKSP 활동을 통해 얻어가고 싶은 것 등)가 있나요?

유소망 | YKSP 활동은 개발협력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매우 자세히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해당 사업에서 얻은 여러 경험들을 향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다시 참가할 때 온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호 | 향후 국제개발협력을 비롯해 공익을 실현하고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YKSP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선을 다해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계획

국제개발협력연구

#	과제명	주요내용
Ⅰ.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지식공유사업의 발전방향	■ 지식공유사업의 위상 및 사업실적과 성과 평가 ■ 지식공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점검 및 내부 개선 사항을 도출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및 제시 ■ 해외 국제개발협력 및 연구기관 조사 및 선진 사례 발굴 ■ 지식공유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도출
2	개발도상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및 과제	■ 산업부문별로 산업기술혁신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 ■ 한국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경제상황과 성장단계에 맞게 자생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기술혁신 표준모델(K-Innovation)”구축
3	뉴노멀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환경·에너지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개도국의 정책 분석 ■ 선진국-개도국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선진국-개도국간 기후금융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에너지 전환의 효과성 분석 : 한국의 경험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 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방안
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협력 역할과 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배경 및 주요국의 전략 분석 ■ 한국의 공급망 구조 및 노출도 분석 ■ 핵심광물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 관련 시사점 도출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협력의 역할 및 방향성 모색
Ⅱ.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		
5	중진국 함정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지식공유사업에의 시사점	■ 한국이 중소득국 단계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경쟁, 기술혁신, 고등교육)을 당시의 정책적 과제와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시사점 도출
6	개발금융 경험 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 개발금융 관련 최근 동향 및 주요 의제 ■ 선진국의 개발금융 파트너십과 지원 전략 ■ 개발금융기관의 개발도상국 지원 효과 ■ 개발도상국의 개발금융기관 역량강화 체계화 방안 ■ 개발금융을 활용한 지식공유 고도화 전략
Ⅲ. 개발협력성과평가 연구		
7	국제개발협력의 유형별 성과지표 연구	■ 해외 선진공여국 및 공여기관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검토, KSP 사업에의 시사점 도출, 평가의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 ■ 지식기반 개발협력 평가체계 구축 및 사례 분석
Ⅳ. 지역·국가 심층연구		
8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	■ KSP 사례 기반를 기반으로 협력국 및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제도 현황 분석, △정책·제도 협력 사례 조사, △정책·사업 시사점 도출 및 제시 *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페루 보건분야 디지털 전환, 중남미 국가 순환경제 전환 등

9	디지털 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 디지털무역을 통한 개발(Digital Trade for Development) 관련 국제 논의 및 도전과제 분석 ■ 디지털무역 협정 분석 및 협력의제 유형화 및 체계화 ■ 디지털무역 관련 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조사 ■ 디지털무역 원활화 및 개발도상국 디지털무역 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와 추진방향 제시

국제협력사업

#	협력기관	주요내용
Ⅰ.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현황 분석 국가 생산성 제고 전략 및 액션플랜 개발
2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기후변화 관련 APO 회원국 생산성 분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 및 시사점 제시
3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자문** 주요 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자문

국제행사

#	협력기관	주요내용
Ⅰ. 개발협력 정책연구		
1	세계은행	■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워싱턴D.C.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2	브루킹스연구소	■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예정)/워싱턴D.C.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3	ADBI	■ **2024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동경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

2024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국제협력과 지식공유(Sharing Knowledge, Sharing the Future) (최근 3년)

연도	세부 내용
2023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 폴란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정책환경을 중심으로 ■ 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 세르비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혁신기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2022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2: 뉴노멀시대의 스마트정책 사례** ■ 기후변화 대응 ■ 행정 ■ 재정 ■ 농업 ■ 생산 ■ 교육 ■ 헬스케어
2021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3: 협력국 사례연구** ■ 디지털인프라 및 서비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전방안 ■ 에너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 교통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전 방안 ■ 개발금융의 이해와 활용

국제협력사업

협력기관	연도	사업명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2023	■ Promoting Digitalization for Green and Inclusive Growth in Developing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개발은행(ADB)	2021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3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2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2022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아시아생산성기구(APO)	2020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2020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1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2019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협력기관	연도	사업명
미주개발은행(IDB)	2021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2022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 · 연구
	2018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UNDP)	2017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연도	협력기관	행사명 및 내용
2023	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워싱턴D.C.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ADB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인천 송도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ADBI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I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인천 송도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인천 송도7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2023	-	**2022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서울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2020	-	**2020 KDI 글로벌 포럼**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서울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과거 글로벌포럼 프로그램

2023년 글로벌 포럼

행사명: KDI-WB TDLC 지식공유 공동 글로벌 포럼

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10:00~15:00 **장 소:** 일본 도쿄, 도쿄개발교육센터

시간	프로그램
개회식	
10:00-10:15	■ 개회사	Yasuaki Yoneyama 소장(세계은행 Tokyo 사무소) ■ 환영사	고영선 부원장(KDI)
10:15-10:25	■ 기조연설	Ming Zhang 국장(세계은행)
1부.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발전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10:25-11:00	■ **발표 1 |** 개발도상국 산업무역구조 분석 및 진단 김대용 실장(KDI) ■ **발표 2 |** 개발협력 지식관리 체계화 연구 우혜영 팀장(KDI)
2부. 도시 미래 재구성	
11:00-11:3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 **발표 1 |** 정책사례가이드: 스마트시티 이상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국토연) ■ **발표 2 |** 개발도상국 스마트시티플랫폼모델 구축 제안 이주상 부사장(ESE)
11:30-12:00	친환경, 회복 및 포용적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 **발표 |** 세계은행 국가 기후 및 발전보고서 Megha Mukim(세계은행)
3부. 지식 기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13:00-13:50	■ **발표 1 |** 지식과 역량강화의 중요성 Neil Ravena (필리핀 일로일로시 국장) ■ **발표 2 |** 지식공유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 Mark Roberts(세계은행) ■ **발표 3 |** 지식공유와 역량개발 김예림 팀장(KDI)
4부. 패널토론	
14:05-14:55	■ 시민들의 수요와 지식의 역할(좌장: 고영선 부원장, KDI) Megumi Muto(JICA 부총재) Shahina Myshan(스리랑카 콜롬보시 국장) Neil Ravena (필리핀 일로일로시 국장)
폐회식	
14:55-15:00	■ 폐회사	Ming Zhang 국장(세계은행)

2022년 글로벌 포럼

행사명: 2022 KDI 글로벌 포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일 시: 2022년 11월 16일(목) 10:00~15:00 **장 소:** 서울 양재 엘타워

시간	프로그램 및 연사
08:30-09:30	■ 현장 최종 점검 및 현장 참석자 등록
개회행사	
09:30-09:35	■ 개회사 | 고영선 KDI 원장직무대행
09:35-09:50	■ 기조연설: "지속가능한 개발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Tetsushi Sonobe,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
09:50-10:00	■ 사진촬영
특별세션: 아태지역 디지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와 방향	
10:00-10:10	■ **발표 1 |** 호-아세안 디지털 무역 협력 전략 Ben Cas, 디지털 무역 및 신기술팀, 무역투자그룹,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 대행
10:10-10:20	■ **발표 2 |** 한-아세안 표준 협력 네트워크 이희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10:20-10:30	■ **발표 3 |** 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 전략 Sivaram Superamanian, 아세안 사무국 디지털 경제과 과장
10:30-10:40	■ 휴식
주제발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역할	
10:40-10:50	■ **발표 1 |** 그린·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한 법제화 – 스마트 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장은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0:50-11:00	■ **발표 2 |** 글로벌 공급망의 기회와 위기 박건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11:00-11:10	■ **발표 3 |**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헬스케어 분야 강화 방안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협력국의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 좌장: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11:10-11:20	■ **토론 1 |** 협력국의 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지식공유 방안 최지영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과장
11:20-11:30	■ **토론 2 |** 디지털 경제 전환(헬스케어 분야) 사례 및 협력 방안 Randi Munk, 보건&의료 참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11:30-11:40	■ **토론 3 |** 그린·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11:40-12:00	■ 질의응답(특별세션 및 주제발표자) 및 폐회
12:00-13:00	■ 오찬 및 행사 종료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2023년 특별호

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 김정욱

이슈톡
-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 김은주
-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 권율
-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 방호경 · 이소희

동향 분석
-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이요한
-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 김은경
-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 정상희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김은지

KSP 포커스
-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 윤근영

CID 연구포커스
-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

2023년 3호

이슈톡
-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
-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

동향 분석
-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
-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KSP 포커스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
-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

CID 연구포커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

2023년 2호

이슈톡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동향 분석
-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
-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

KSP 포커스
-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보배
-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

CID 연구포커스
-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외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

2023년 1호

이슈톡
-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 임호열
-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 성한경

동향 분석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김은주
-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 이재광
-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 황금물결

KSP 포커스
-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 유성희

CID 연구포커스
-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김대용, 이소희

2022년 3호 ▶	**이슈톡**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 정성철 ▶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 김성규 ▶
	동향 분석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 김유나, 홍은선
	CID 연구포커스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김정욱,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
2022년 2호 ▶	**이슈톡**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
	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
	KSP, 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
	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
	YKSP 스토리/CID 소식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
2022년 1호 ▶	**이슈톡**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
	동향 분석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예림
	KSP, EIPP 포커스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
	CID 연구포커스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

▶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 의 김다오미 연구원(044-550-4276, kdom228@kdi.re.kr)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발 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 행 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 집 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김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김다오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 의 044-550-4276,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